

가계부채 해소방안*

남 주 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서론

1997년의 금융위기는 과도한 기업부채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의 증가에 의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의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19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신용할당에 의한 대기업 지원, 재벌의 확장적 기업경영, 그리고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삼박자에 따른 것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은 부실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의해 1998년의 303%에서 2009년에는 109.6%로 급격히 떨어져 당분간 기업부채가 우리경제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반면에 정부부채는 2010년에 392조원으로 GDP 대비 34.5%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협의의 정부부채규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부채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나 2007년에 정부부채에 관한 발표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부는 298.9조원, 조세연구원의 686조원, 한국재정학회는 1,198조원, 이한구의원의 경우는 1,285조원 등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가 다른 이유는 정부부채에 포함된 기금, 비영리 공공기관의 포함여부, 우발채무에 대한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협의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우발채무나 통합재정, 그리고 기금 등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공식 국가부채는 392조원으로 GDP대비 34.5%에 불과하나 공공기관부채와 통안채를 포함한다면 국가부채규모는 941조원으로 GDP대비 82.6%으로 크게 상승한다. 다

* 이 글은 편집자의 요청에 의하여 남주하·김정렬·이규복(2012)의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개혁』의 8장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만 아직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공식 통계상 한국의 정부부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복지, 통일 등 다양한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에 대한 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부채규모(2010년 기준)

(단위: 조)

공식 국가 부채	공공기관부채	통안채	총부채
392(34.5%)	386	163	941(82.6%)

주: ()은 GDP대비 비율.

특히 국제기준에 따른 한국의 저평가된 국가부채에 대해 안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채의 개념과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가부채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G-20 국가의 국가채무 수준 비교(IMF기준): 2009년

(단위: GDP 대비, %)

	한국	Advanced G-20 countries	Emerging market G-20 countries
국가채무	34.9	98.9	38.9

자료: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 November 2009.

Advanced G-20: Canada, US, Australia, France, Germany, Italy, UK, Japan, Korea, EU.

Emerging G-20: Argentin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Russia, South Africa, Saudi Arabia, Turkey, Mexico.

지금시점에서는 정부부채보다 시급하고 위협적인 요인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이다. 가계부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조만간에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조만간에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가계부채는 10여년 이상 누적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법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가계부채의 축소과정에서 무엇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 한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912조원(가계신용기준)에 이르렀으며, 10년 전인 2000년 말 266.9조원에 비해 3.4배가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증가폭이 지나치게 크다. 과거 11년 동안 평균증가율도 12%를 넘어 2012년 말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가계부채의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가계의 이자부담이 56조원(2011년 3분기)에 달해 부채상환능력의 악화가 심화되어 더 이상 가계부채를 방치하다면 저소득계의 붕괴는 시간문제이다. 가계부채

는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는 축소하는 경향 (deleveraging)이 있으나 최근 금융위기동안에도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여 과연 한국의 경제구조상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가계신용 증감 내용

(단위: 조원, %)

구분	가계신용	가계대출	주택대출	판매신용	가계신용 증가율	가계대출 증가율	주택대출 증가율	판매신용 증가율
1997	211.2	185.0	-	26.2	20.9	22.5	-	10.8
1998	183.6	165.8	-	17.8	-13.0	-10.3	-	-32.0
1999	213.0	191.9	-	22.1	16.5	15.7	-	24.0
2000	264.1	241.1	-	25.8	24.7	25.6	-	16.9
2001	341.7	303.5	-	38.2	28.0	25.9	-	47.7
2002	439.1	391.1	-	47.9	28.5	28.9	-	25.7
2003	447.6	420.9	-	26.6	1.9	7.6	-	-44.5
2004	474.7	449.4	-	25.3	6.1	6.8	-	-5.1
2005	521.5	493.5	208.4	28.0	9.9	9.8	-	10.9
2006	582.0	550.4	240.9	31.5	11.6	11.5	15.6	12.5
2007	630.7	595.4	292.8	35.3	8.4	8.2	21.5	11.9
2008	688.2	648.3	311.2	39.9	9.1	8.9	6.3	13.1
2009	733.7	692.0	338.5	41.7	6.6	6.7	8.8	4.4
2010	795.4	746.0	362.8	49.4	8.4	7.8	7.2	18.5
2011	912.8	858.1	391.9	54.7	14.7	15.0	-14.8	10.7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먼저 가계대출의 증가는 19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이후 은행들이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대출을 급격하게 축소한 대신에 주택담보대출위주의 가계대출을 늘린 데에 기인한다. 과거 금융위기는 대기업의 방만한 투자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나타났으나 위기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을 확대한 것이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4.3%에 달해 같은 기간 동안 경상 GDP 증가율인 9.5%의 2.5배에 이르렀으며, 가계부문의 은행대출증가율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들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위기이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이 2001년부터는 60%를 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가계대출증가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로 유입되어야 할 자금들이 가계로 배분됨으로써 자금흐름의 왜곡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부터 가계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가계대출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 다시 과거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과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도 부동산담보에 의존하는 금융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및 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추이

(단위: 십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303,131	365,596	430,606	492,453	617,154	677,502	709,768	768,805	867,989	1,020,193	1,159,403	1,223,002	1,286,928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기업	41,918	42,438	43,965	31,976	32,095	27,835	24,741	28,670	27,349	54,875	88,946	87,622	99,913
(%)	13.8	11.6	10.2	6.5	5.2	4.1	3.5	3.7	3.2	5.4	7.7	7.2	7.8
중소기업	95,387	131,217	145,572	156,958	193,940	228,729	235,629	246,666	290,209	369,921	422,131	443,414	441,050
(%)	31.5	35.9	33.8	31.9	31.4	33.8	33.2	32.1	33.4	36.3	36.4	36.3	34.3
가계	165,826	191,941	241,069	303,519	391,119	420,938	449,398	493,469	550,431	595,397.2	648,327.2	691,966.6	745,965.1
(%)	54.7	52.5	56.0	61.6	63.4	62.1	63.3	64.2	63.4	58.4	55.9	56.6	58.0

주: 1)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예금은행(은행신탁대출 포함).

2) 전체 대출액 = 기업대출 + 가계대출.

자료: 한국은행.

1997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기관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가계대출위주로 운용을 해왔으나 신용리스크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신용대출보다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자금흐름의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경제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계가 작성한 이후(20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연10%가 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23.6%의 증가를 보여 가계신용 및 가계대출의 평균 증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금융기관과 가계 모두 부동산가격의 하락 시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참여정부 말에 도입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위한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의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03년의 카드사태를 초래했던 판매신용은 2002년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10% 초반대로 떨어져 과거에 비해 안정적이다. 다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많은 부분이 원인이 생계형 대출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향후 판매신용의 증가는 언제든지

지 나타날 수 있는 가계대출증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판매신용을 포함한 생계형 대출관련 추이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경우 소득증가가 생계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수준이면 소비지출을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경제가 회복됐다는 징후가 거시적 관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아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저소득층에는 경제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실화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2010년에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증가가 5.7조원으로 판매신용 총액 7.7조원의 74%를 차지하고, 잔액도 39.5조원에 이르러 위험수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판 매 신 용

(증감액, 조원)

	2009	2010			2011				
	연중	연중	3/4	4/4	연중	2/4	3/4	4/4	잔액
판 매 신 용	1.8	7.7	1.7	4.4	5.4	1.1	1.3	3.2	54.8
여신전문기관	1.8	7.5	2.0	4.4	5.3	1.1	1.3	3.1	53.7
┌ 신용카드회사	3.6	5.7	1.7	3.5	3.9	1.0	1.1	2.3	43.9
└ 할부금융회사	-1.9	1.7	0.3	0.8	1.4	0.2	0.2	0.8	9.8
판 매 회 사 ¹⁾	0.0	0.2	-0.3	0.1	0.1	0.0	0.0	0.2	1.0

주: 1) 백화점, 자동차사 등이 제공한 판매신용.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향후 축소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증가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보완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개인소득이나 경제성장을 보다 낮다면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면 언젠가는 경제과탄을 초래할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이론이다. 국내가계부채는 개인가처분 소득이나 GDP에 비해서 증가속도가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에 비해 늘어난다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 더욱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문제가 저소득층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997년 금융위기이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연평균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경상GDP증가율(7.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가처

분소득증가율(5.7%)에 비해서는 2.3배나 높아 그동안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약화됐는지를 알 수 있다. 정책적 대응이 늦어진다면 가계부채문제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계부채, 개인가처분, 경상GDP 증가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증가율
가계부채증가율	16.5	24.7	28	28.5	1.9	6.1	9.9	11.6	8.4	9.1	6.6	8.4	13.3
개인가처분소득증가율	5.7	4.7	5.3	6.6	8.3	8.1	4.6	4.2	4.7	5.9	4.2	6.5	5.7
명목 GDP증가율	9.6	9.9	8	10.6	6.5	7.8	4.6	5	7.3	5.3	3.8	10.1	7.4

주: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자료를 사용.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가계부채의 붕괴는 은행권보다는 리스크관리가 부족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진행되면 은행보다는 결국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의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실정도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도 비은행예금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비은행권대출의 증가는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가계들이 생계형대출을 주로 비은행권금융기관에 의존한 결과이다.

한국은행 가계신용(2011.12월말)



주: 비은행취급기관: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우체국예금.
 기타금융기관: 보험기관, 여신전문기관,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증감액, 조원)

	2010				2011				잔액
	연중	1~9월중	2/4	3/4	1~9월중	2/4	3/4	4/4	
예금취급기관	45.1	27.6	13.9	10.2	32.7	15.6	10.8	14.1	642.7
	(8.2)		(7.5)	(7.4)		(8.8)	(8.7)	(7.9)	
예금은행	22.0	13.1	8.6	3.7	18.2	9.2	5.4	6.2	455.9
┌ 주택대출	15.9	9.6	5.1	2.8	13.6	5.1	4.0	5.6	308.9
├ (주택담보대출)	20.3	12.6	5.9	3.6	15.1	5.4	4.3	6.5	306.1
└ 기타대출	6.0	3.5	3.6	1.0	4.5	4.1	1.3	0.6	147.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3.2	14.5	5.3	6.4	14.6	6.4	5.4	7.9	186.8
┌ 주택대출	8.4	5.5	2.1	1.8	7.0	2.5	2.6	3.0	83.1
├ (주택담보대출)	8.5	5.6	2.2	1.8	7.0	2.5	2.6	3.0	83.1
└ 기타대출	14.8	8.9	3.1	4.7	7.6	3.9	2.8	4.9	103.7
┌ 상호저축은행	0.8	-0.1	-0.5	0.4	1.3	0.5	0.5	0.8	10.2
├ 신용협동조합	4.0	2.6	1.1	1.1	2.3	0.8	0.5	0.7	22.9
├ 상호금융	11.4	8.1	3.4	3.1	7.3	3.5	2.9	4.9	118.5
├ 새마을금고	7.2	3.9	1.3	1.9	3.7	1.6	1.4	1.3	33.6
└ 신탁·우체국예금	-0.2	-0.2	0.0	0.0	0.0	0.0	0.1	0.2	1.7
기타금융기관 등	14.5	8.7	2.6	4.4	10.7	2.2	4.2	5.0	215.4
	(7.7)		(10.7)	(9.0)		(8.7)	(8.4)	(6.8)	
┌ 보험기관 ¹⁾	2.0	0.9	-0.1	0.5	4.1	0.5	3.0	2.3	74.7
├ 연금기금 ²⁾	0.7	0.3	-0.2	0.4	-2.1	-2.1	0.0	0.0	11.0
├ 여신전문기관 ³⁾	4.8	3.2	1.1	1.3	1.9	1.4	0.0	0.6	38.8
├ 공적금융기관 ⁴⁾	-2.5	-2.2	0.2	-0.5	0.7	0.0	-0.1	0.9	30.5
├ 기타금융중개회사 ⁵⁾	6.4	3.9	1.3	1.7	3.7	2.4	0.0	1.2	53.2
└ 기타 ⁶⁾	3.1	2.6	0.3	0.9	2.4	-0.1	1.2	-0.1	7.2
합 계	59.6	36.3	16.5	14.6	43.4	17.8	14.9	19.0	858.1
	(8.1)		(8.3)	(7.8)		(8.7)	(8.6)	(7.6)	

- 주: 1)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3) 카드사, 할부사 등.
 4)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5)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
 6) 한국장학재단 등.
 7) ()내는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가계부채의 금융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대책을 찾는 일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2010년 예금은행 대출은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20.3조원)의 증가로 인해 2009년의 20.9조원에 비해 1.1조원 증가한 22조원이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증가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하며, 이는 강남3구 지역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3.2조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상호금융(11.4조원)과 새마을 금고(7.2조원)를 차지하고 있어 예금은행보다 리스크관리가 소홀한 비은행예금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6조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실정이나 비은행권, 기타금융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없이는 가계부채의 해결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신용카드사의 대출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신용카드사의 대출은 작년보다 4.4조원하여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증가(8.9조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저소득계층의 생계자금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하고, 위험관리가 엄격하지 못한다면 결국 가계부채의 파국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별 가계대출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확인되고 있다. 2002년에 전체예금기관에서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이었으나 2010년에는 26.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29%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비금융기관의 가계대출증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억제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금융기관 가계대출 중 비은행예금기관 가계대출 비중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2.0	23.9	19.8	21.2	22.3	22.3	21.9	23.3	24.7	25.6	26.9	29.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부채는 결국은 갚아야한다는 금융의 기본원칙이 국내가계부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부채는 원금상환을 전제로 발생하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거나 일정기간동안 분할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국내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결합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구조가 분할상환보다 일시상환으로 돼있어 만기가 도래해도 원금상환 없이 만기연장을 하는 관행에 젖어있다. 빚은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습관이 중요하고, 정부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부채상환을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부채가 만기에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형식적인 만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기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가계들이 부채상환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상환구조로는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단위: %)

	07말	08말	09말	10.6말
일시상환대출	39.5	37.4	40.4	38.9
분할상환대출	60.5	62.6	59.6	6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 ¹	87.6	86.2	85.0	84.0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12.4	13.8	15.0	16.0

주: 일시상환대출+분할상환대출중 거치기간중인 대출.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 16호(우리, 국민, 신한, 하나, SC제일, 농협 등 국내 6개 대형은행기준).

이러한 우려는 이자만 납입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금융기관이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한데 기인한 것이다. 담보만 있으면 만기가 무한대처럼 연장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근본적인 잘 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금융관행 속에서 대부분의 가계는 대출은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해야한다는 사실을 망각할뿐더러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금융기관, 가계, 정부 모두 빛은 반드시 만기에는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빛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가계대출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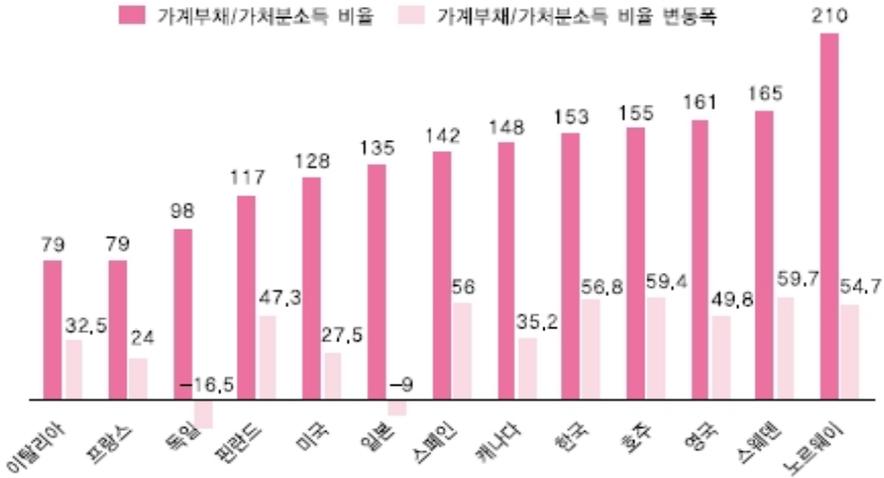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채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부채증가가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보다 장기간동안 높다면 언젠가는 과다부채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사실 검증된바 없다. 다만 부채증가의 속도나 부채상환 능력 등에 의해 위험정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가계부채의 수준을 국제수준과 비교해보면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9년에 153%에 이르러 부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속도도 과거 10년 동안 56.8%에 달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영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니어서 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나 경제상황이라도 악화된다면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래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다른 주요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한국과 스웨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¹ 비율 및 변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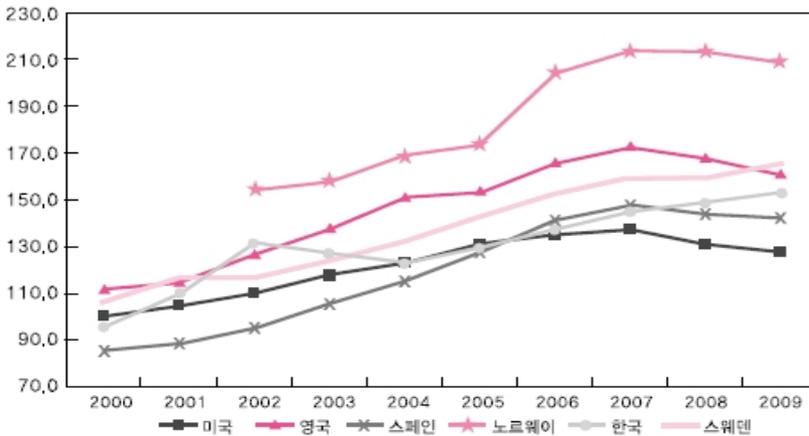
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9년 기준.

이 비율의 변동폭은 2000~200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보고서(2010.3).

주요국 가계부채/가처분 소득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3).

3. 가계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증가에 비해 높아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의 악화를 초

래하며, 특히 저소득 및 저신용등급계층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의 가구의 비 소비지출 동향에 의하면 2011년 연간 가구당 월 평균 비 소비지출은 722천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나 이자비용은 2010년 77.8천원에서 2011년 87.9천원으로 13%가 증가하여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이자비용이 비 소비지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010년에는 11.5%에 달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1년에는 12.2%로 이어지고 있어 가구당 이자부담이 가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계의 이자부담의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다간 가계의 부실화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4/4분기		연간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비소비지출	645.4	6.7	626.4	3.7	654.0	1.3	674.0	100.0	7.6	736.6	6.1	700.8	6.3	746.3	7.4	703.3	7.5	722.3	100.0	7.2
경 상 조 세	96.6	2.8	94.3	-4.7	101.3	4.9	105.3	15.6	11.7	105.6	12.5	101.9	8.4	140.8	5.6	107.2	5.8	113.9	15.8	8.2
비경상조세	10.2	60.2	10.6	17.7	11.1	9.1	11.6	1.7	9.3	13.4	35.8	19.3	36.0	12.5	11.0	8.2	-26.1	13.4	1.9	15.1
연 금	90.5	9.7	86.4	4.8	96.3	6.4	94.8	14.1	9.7	98.3	5.6	101.3	6.2	104.2	9.2	105.5	9.5	102.3	14.2	8.0
사 회 보 험	84.3	8.2	82.6	7.9	91.2	8.3	90.7	13.5	9.7	95.7	8.7	106.3	13.9	102.2	12.5	101.8	11.6	101.5	14.1	11.9
이 자 비 용	68.5	-0.4	67.0	2.9	81.0	18.3	77.8	11.5	16.2	81.3	11.7	86.3	11.4	90.3	12.6	93.6	15.5	87.9	12.2	13.0
가구간이전지출	203.7	16.3	198.2	9.1	179.6	-11.8	204.0	30.3	2.9	249.1	0.8	192.3	-0.8	204.1	3.2	188.1	4.7	208.7	28.9	2.3
비영리단체로 이전	91.8	-8.8	87.4	-3.2	93.4	1.8	89.9	13.3	2.9	93.3	3.9	93.5	2.7	92.4	7.6	98.9	5.9	94.6	13.1	5.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2011).

통계청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계층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5분위와 4분위의 부채점유율이 각각 51.1%와 21.8%를 차지하여 전체부채에서 72.9%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3.9%와 9.4%를 점유하고 있어 저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중이 낮고,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계층의 부채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¹⁾ (유경원, 2009)

그러나 1분위와 2분위의 부채점유율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3.9%에서 5.6%로, 9.4%에서 10.6%로 각각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의 부채증가가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

1) 유경원(2009)은 다만 위험대비 금융자산의 미흡, 지속적인 부채규모의 상승 등으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음.

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어서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치는 충격을 감안한 가계부실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소득 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 체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부채가구 비중	29.7	32.8	56.9	59.8	65.5	68.3	72.3	75.6	75.2	77.4	59.9	62.8
총부채(전체가구)	932	1,445	2,236	2,748	3,264	3,850	5,131	5,953	12,111	12,023	4,738	5,205
총부채(부채가구)	3,137	4,400	3,930	4,595	4,986	5,637	7,099	7,879	16,116	15,530	7,908	8,289
부채점유율	3.9	5.6	9.4	10.6	13.6	14.8	21.8	22.9	51.1	46.2	100	100

주: 총부채=금융부채(금융대출+갯돈 미불입금)+임대보증금.

자료: 통계청, 2010, 2011 가계금융조사.

* 2011년 가계금융조사의 경우 자산 및 부채는 2011.3.31 현재, 소득 및 지출은 2010년 연간 기준으로 조사.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가처분소득)에 있어서는 1분위가 3.65으로 전체평균인 1.55에 비해 매우 높아 저소득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도에는 부채상환능력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2010년의 높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1년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저소득계층의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능력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 체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총부채/총자산	0.18	0.13	0.22	0.17	0.22	0.17	0.20	0.18	0.21	0.18	0.21	0.18
금융부채/가처분소득	3.65	2.02	1.97	1.24	1.44	1.06	1.39	1.07	1.53	1.03	1.55	1.10
총부채/가처분소득	5.85	2.79	2.72	1.80	2.17	1.51	1.89	1.52	2.11	1.52	2.17	1.59

자료: 통계청, 2010, 2011 가계금융조사.

이러한 결과는 2011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의 분석(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득 중상위계층(3분위~5분위)이 금액기준으로는 84.9%를, 가구수 기준으로는 70.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채보유 가구의 비중도 소득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아 1분위의 경우 24.2%에 그

2) 신동진(2010) 역시 우리나라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지 않은 차주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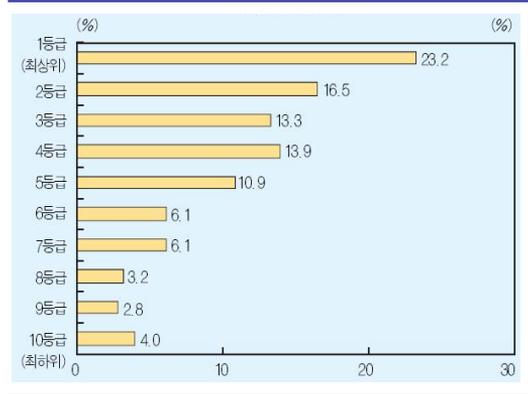
치고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기인한 것이다.

소득계층별 부채보유가구 비중¹⁾



주: 1) 분위별 부채보유가구수/분위별 전체가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신용등급별 가계대출¹⁾ 비중(2009 9월말 기준)



주: 1) 잔액기준, 비은행대출 포함.
자료: 한국신용정보.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소득이 높은 계층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비율이 1분위 계층은 3.22로 2~5분위 계층의 1배가 조금 넘는 수준에 크게 높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분위별 부채상환능력(2011년)

(단위: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가처분소득	517	1,526	2,556	3,908	7,904	3,283
총부채	1,445	2,748	3,850	5,953	12,023	5,205
총부채/가처분소득	2.79	1.80	1.51	1.52	1.52	1.59

자료: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가계부채의 급속하게 증가한다 해도 경제가 갑작스레 과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부채들이 수많은 가구들로 분산되어 있어 총량적으로는 위험해보여도 실제 위험은 분산되어 있어서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가계부실화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보다는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의 위축이나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에 수많은 가계도산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

특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급한 경제문제에 우선순위를 뺏길 수도 있다. 가계부채의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단기적인 해결방법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아직 안정적이라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최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단기간 내에 위기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계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의 연체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낙관적인 견해가 타당한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사태에서 보듯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과소하게 보고될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난 후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금융기관 대출채권 연체율

(단위: %)

은행	'09년				'10년				'11년				'12년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12말	1월
기업대출	2.04	1.68	1.56	0.97	1.46	1.34	1.68	1.13	1.41	1.19	1.33	1.09	1.34
대기업	0.70	0.82	0.81	0.35	0.95	0.82	0.85	0.35	0.67	0.25	0.50	0.25	0.30
중소기업	2.33	1.86	1.72	1.09	1.57	1.46	1.86	1.30	1.59	1.43	1.56	1.34	1.65
가계대출	0.73	0.59	0.54	0.48	0.53	0.57	0.68	0.61	0.63	0.72	0.71	0.67	0.78
주택담보대출	0.56	0.43	0.41	0.33	0.36	0.44	0.58	0.52	0.51	0.67	0.63	0.61	0.69
원화대출 계	1.45	1.19	1.11	0.74	1.04	0.99	1.24	0.90	1.06	0.97	1.04	0.89	1.08
신용카드사	3.59	3.10	2.53	2.23	1.96	1.84	1.83	1.68	1.63	1.74	1.91		
리스사	4.32	4.11	3.99	3.69	3.04	3.92	3.62	3.18	2.19	2.31	3.17		
할부금융사	3.18	3.23	2.89	2.46	2.44	2.33	2.53	2.42	2.51	2.40	2.58		
저축은행		10.34		9.34		10.55		10.76		19.25			
신용협동조합		4.35		3.74		3.99		3.66		3.67			
은행신용대출										0.6			
카드업체 현금서비스										2.3			
카드론										2.1			
캐피탈 신용대출									3.8				
대부업체 신용대출										7.2			

* 은행은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으로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 신용카드, 리스사는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로 대환대출 포함.

*** 할부금융사는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로 대환대출 제외.

****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건전성 분류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나타냄.

***** 11년 2분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KB국민 평균임.

자료: 금융감독원.

다만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가계의 자금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계대출 건전성은 강화하되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4. 가계부채 해소방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다. 운이 좋다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시간이 지나도 터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상황은 이러한 요행만을 기다리기에선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침체와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이 불확실성과 경제의 어려움을 당분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더 이상 방치하다간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도 크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오랜기간을 통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장단기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축소는 단기적으로 약탈적 대출 억제, 인터넷, 전화, TV, 이메일 등을 통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의 과대광고 차단 등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과 금융건전성 차원에서의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제도개선, 가계부채 해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가계의 서민금융지원강화와 같은 안전장치 준비 등의 단기적 대책과 금리인상과 소득증대와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동원될 때 가능하다.

정부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의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강화를 위해 예대율 준수기간 단축(13년 말 → 12.6월말)하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도 제시하였다. 이외에 가계대출 구조 개선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밀어내는 소위 풍선효과를 초래할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인다. 1차 가계대출축소방안은 은행의 대출축소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이는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을 내모는 효과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2012년 2월27일에 발표한 2차 가계부채축소방안은 주로 제2금융권의 대출축소에 맞춰져 있다. 특히 제2금융권중에서 대출이 급증한 보험사, 상호금융 등의 대출축소를 위한 규제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풍선효과에 의해 이 역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제2금융권의 자금수요자들이 대출규제강화로 인해 대부업체로 몰려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대책으로 판단된다.

가계대출 축소대책(2011.6.29)

구분	내용	시행시기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201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선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 확인관행 정착 등	
	예대율 준수기간 단축(13년 말 → 12.6말) 등 관리강화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여전사·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 단계적 강화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방안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대출모집인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점검 강화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추가 검토 대상 대책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자료: 금융위원회.

이러한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들로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추세를 억제하기 어려우며 좀 더 근본적인 정책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먼저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대부분의 과거정부들의 부채를 조장하는 금융정책을 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보다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쓴다면 가계부채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둘째 부채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갚아야한다는 인식을 가계들이 갖도록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이 만기에 이루어지는 대출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가계들이 빚에 대한 무서움도 없이 미래에 막연히 갚으면 되겠지하는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가 10여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축소를 위한 정책도 장단기 정책을 동원하여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민가계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저소득계층 및 저신용계층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금융권 자계대출 규제 주요내용(2012.2.27)

구분	내용	시행시기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비중 3분의 1로 축소	1분기(수협: 2015년)
	대출시 상환능력 서면으로 확인	2분기
	타지역 조합원은 대출시 '비조합원'으로 분류	올해 중 국회제출
	예대율 80% 이하로 제한	2~3분기
	거치식 일시상환 다중채무 대출을 고위험 여신으로 분류	3분기
보험사	가계대출 손충당금 적립 기준 은행수준으로 강화	2분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기준자기자본(RBC)비율 위험 가중치 상승	2분기
	보험설계사의 반문, 문자메세지, 전단통한 대출영업 억제	1~2분기
서민금융	바꿔드림론 연내 4000억 지원	연내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장' 5000억원 공급	2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강화	연내

자료: 금융위원회, 매경.

가계대출 축소방안(요약)

분야	주요내용
(1)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대책: 소득증가, 고용창출, 가계대출증가율 관리 - 중기대책: 금리인상 - 단기 및 미시대책: 제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의 개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2) 제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권유 차단(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카드론, 보험사대출,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의한 저신용, 저소득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권유나 과대광고(인터넷, 이메일, 전화, TV광고 등)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3) 바은행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와 대출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카드사의 카드한도 축소, 카드보유갯수 제한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을 억제 - BIS 자기자본비율의 엄격한 규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4)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V와 DTI 규제를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도시까지 확대 - 신규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의무화 - 주택금융공급의 제도의 안정성 제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5) 가계대출축소에 따른 충격예방	가계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 확대(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참조)

1) 단기대책

(1) 제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권유 차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최근 저소득, 저신용등급 계층에 대한 제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권유와 고금리 대출상품 판매 등에 의한 가계대출증가는 수많은 가계들을 신용불량자와 파산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 금융소비

자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약탈적 대출권유와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저소득, 저신용 등급의 가계들의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가계수지의 악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카드론, 보험사대출,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의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권유나 과대광고(인터넷, 이메일, 전화, TV광고 등)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가계대출은 대부분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파산과 자살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출권유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없는 가계는 재정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른 safety net을 활용하고, 창업이나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규제: 금융건전성 차원에서 대출억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가계부실화에 따른 비은행예금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은행예금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의 확대가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부실화 예방과 가계대출의 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엄격한 적용,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의 추이를 통해 가계대출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회계는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재무제표의 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사태에서 보듯이 재무제표 상으로만 경영상태를 판단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되면 적정시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준에 따라 감독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과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

(3) 부채확대 금융정책 삼가야

국내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한 배경에는 가계부채를 조장해온 정부의 금융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관리와 신용조절을 통한 금융정책은 통화신용정책과 함께 금융시장과 민간부문의 유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 외에 금융기관의 여신운영과 한도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이 가계부채증가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계는 늘 돈을 빌리려는 속성이 있는데 금융기관은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대출확대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적절한지를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로 공급되는 자금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정책당국은 유동성 규제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현재의 과다부채문제를 초래하였다.

유동성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의 실패는 2003년에 발생한 카드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한 곳(재정부)에 두어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감독정책이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견제하지 못한 것이다. 즉, 2003년의 카드사태는 금융감독정책이 금융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려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납발을 규제하지 못해 발생한 금융정책의 실패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정책의 실수는 저축은행의 사태에서 보듯이 MB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이번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에 모두 이관하여 또다시 무분별한 금융정책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견제를 못한 것이다. 금융정책은 카드사태 및 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경기진작을 위해 카드발행과 PF대출과 같은 신용확장을 자극하는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나친 대출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부채를 조장하는 금융정책의 견제를 위한 금융감독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총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금리인상조치와 같은 통화정책은 차치하고서라도 예대율 규제 강화, 총당금 적립율 상향조정과 같은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규제할 수 있다. 2010.8월 감독규정 개정에 의해 2014년까지 예대율 100% 이내로 관리하려는 조치를 100%보다 낮은 수준(예; 90%)으로 강화하거나 분기별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 총당금 적립율을 상향조정한다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sel III의 주요내용들 중 유동성확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본비율규제(기본자본비율 4% → 6%), 유동성 규제도입(장단기 유동성비율 \geq 100%), 레버리지 신설'과 같은 규제들은 원래 공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금융기관에 적용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주택담보대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³⁾

김현정(2010)의 분석에서도 지적됐듯이 국내주택대출시장의 특징은 미국의 대공황이전의 모기지 시장과 유사하다.⁴⁾ Rajan(2010)은 대공황이전의 미국의 모기지 시장은 대부분의 대출이 5년 만기의 일시상환형태의 단기대출로서 변동 금리부 대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및 주택가격변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차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대출계약의 연장이 은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이 어려워진다면 가계의 도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국내주택담보대출의 상황이 미국의 대공황이전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가계대출의 문제를 해

3) 이건호(2011) 역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효율적인 주택금융 공급체계 구축'과 '가계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를 들고 있음.

4) 김현정(2010)의 84쪽을 참조할 것.

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가계대출의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반드시 주택구입자금에만 사용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당부분 가계생계자금에도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대출원금을 갚아야한다는 인식과 관행의 정착이 시급하다. 담보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계속해서 연장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러한 대출구조 하에서는 대출상환능력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방만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습관을 갖게 된다. 국내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80% 정도가 이자만 내는 구조로 되어있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잊고 산다. 만약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대출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해도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는 억제될 것이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모순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당국도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를 우려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고 금융기관에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LTV와 DTI는 폐지되어야하는 규제라고 비판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데서 오는 무지한 의견으로 여겨진다. 금융기관의 경영의 실패가 초래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는 그동안 금융위기의 역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개별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다면 금융시장은 소위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금융기관의 대출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대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직접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직접규제는 아니지만 간접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방만한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한국도 참여정부말기에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위한 규제정책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의 은행권(제2금융권인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및 여전사 포함)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와 LTV 규제는 전국 주요도시로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을 확대하는 규제강화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09)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DTI가 가계부채의 위험관리를 위해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재의 DTI를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으로 보다 유연하게 개편, 발전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들은 DTI를 소득, 직업 등 차주의 특징은 물론 지역별, 업권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신축적인 DTI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좀 더 세련되고 원래의 도입목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더욱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구분	미국 (OCC, FRB등)	홍콩 (HKMA)	싱가포르 (MAS)	영국 (FSA)	독일 (BaFin)	일본 (FSA)	한국 (FSC, FSS)
규제방식	간접규제	직접규제	직접규제	간접규제	일부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규제
LTV한도	1)	60~70%	90~95%	-	60%(일부)2)	-	40~60%
DTI한도	1)	60%	-	-	-	-	40%
규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지침 정비: 표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라인, 주택 담보대출 신용리스크 관리지침, 비정형 주택 담보대출 운영 기준 등 제정·지도 - 리스크관리 강화 및 보호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V비율 준수 여부 검사, CAMEL 등급에 반영 - LTV 및 DTI 비율 계산 방법 상세 - 주택 담보대출 표준약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 실행시 통화감독청(MAS)과 주택개발위원회(HDB)간 유기적 협조체계 - LTV비율 계산방법 상세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LTV 비율 상향 조정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지침 정비: 주택담보대출 업무지침(MCOB), 등 Handbook 발간 -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조: 필수 공시사항 등 의무규정 상세 - 감독당국이 Mortgage Calculator 등 소비자 정보 직접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담보대출 증서 (Pfandbriefe) 발행기관을 대형 또는 우량 금융회사로 제한 (중소형 금융회사는 일정 자기자본요건 충족시 허용) - Pfandbriefe 대상 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을 60%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총량규제 실시 - '92년 총량 규제 해제, Trigger 방식에 의한 총량 규제 도입 - 장기불황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94년 이후 Trigger 방식 총량규제 死文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 밀접 - LTV비율 규제 엄격 - DTI비율 규제 엄격 - LTV 및 DTI 비율 계산 방법 상세 - 리스크관리 강화 강조
최근 주요 관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담보대출 경쟁심화에 따른 비정형 주택 담보대출 비중 증가, 여심 심사 기준완화, LTV 및 DTI 비율 증가로 신용리스크 증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체, 금융기관 공동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과다 리베이트나 이자 지급기간유예 (Interest/Payment Holiday) 제공 등으로 리스크 증가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모기지 비중 증가에 따라 일반 주택 담보대출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역모기지에 대해 MCOB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지론 성장률이 낮아 Pfandbriefe 관련 요건 완화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과당경쟁 방지 - 급작스런 주택 가격 하락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등

주: 1) 감독당국의 LTV 및 DTI 비율 규제는 없으나 Fanni Mae의 리스크 관리기준이 미국업체의 표준으로 활용 (LTV 70~95%, HTI 28%, DTI 36%).

2)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자료: 신동진(2010).

주택담보대출의 개선은 금리선택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으로 구분되는데 국내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형으로 되어있어 소비자들은 금리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금리유형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신규대출의 경우 한국,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고정금리로 운용하고 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많은 국가에서 금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금리 위험 보호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차입자가 금리조정 시 대출금리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금리위험보험상품(interest rate risk insurance)을 판매하고, 스위스의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는 금리상한(interest rate cap)계약을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연 2회 금리를 재조정하고 있으나 매월 상환액을 5년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5년 룰'을 적용하며, 상환액 증가 시 원래 상환액의 1.25배까지로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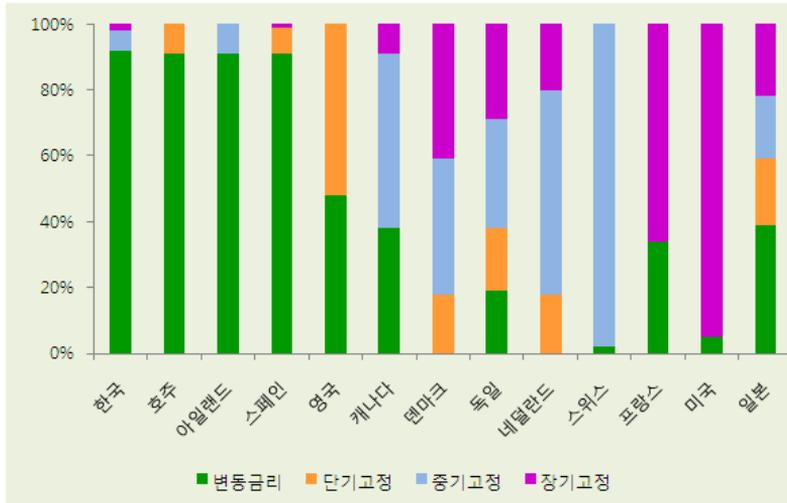
반면에 한국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에 연동되어있어 금리변동이 바로 대출금리의 변동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모두 차입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국내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차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변동금리형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직 국내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운용하는 경우에 장기고정금리의 결정이나 유동화 등을 통한 위험분산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변동금리의 변화폭과 변동시기를 제한하는 정책을 당장 도입하여 차입자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담보대출에 비해 BIS자기자본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낮게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담보대출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는 50%이나 장기고정담보대출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변동금리형은 60%를 적용하여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는 주택금융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금리 및 기간불일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재원의 조달을 위해 모기지 채권 매입·유동화(MBS 발행)·커버드본드 발행(covered bond) 등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⁵⁾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을 세제 감면하는 인센티브의 제공도 고려할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5) 신동진(2010)은 고정·장기대출의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MBS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Fannie Mae처럼 주택금융공사가 MBS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형(2009년 신규대출기준)



자료: RBA, CHMC, EMF, GPG, MBA and S&P.
출처: Lea(2010).

(5) 충격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강화⁶⁾

가계부채의 축소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서민가계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저신용계층이 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나 금리인상등의 추진은 저소득계층의 채무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취급현황

비 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출시시기	2010년 1월	2010년 7월	2010년 11월
대출금액누계 (2011년 6월까지)	3,252억원	1조 6,508억원	6,867억원
대출건수	4만 4,543명	18만 3,144명	8만 6,374명
지원규모	2조 2000억원(10년)	10조원(5년)	은행 영업이익 10%내외 (향후 5년, 4조~5조 지원)
이자율	연 2~4.5%	연 10~13%	연 6~14%
자금용도	창업자금 위주	생계, 운영자금	일반 가계자금

6)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주하·김정렬·이규복(2012)이 쓴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의 7장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와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참조할 것.

저소득계층의 부채로부터 충격을 완화하고 가계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6등급이하의 저신용계층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욱이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파산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에 지원도 더욱 확충하여야 한다. 향후 가계채무조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신

가계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 현황

지원 기관	구분	지원대상	지원 내용	재원
신용회복기금	소액대출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이행자	-한도: 500만원 -금리: 연 4%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출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반환자금)
	채무조정	신용회복기금 매입채권의 채무자* *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3개월 초과 연체중인 자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 최대 30% 감면 -변제기간: 8년 이내	
	전환대출 신용보증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정상상환자	신용보증을 통해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대부업체, 캐피탈 등)을 은행의 연 12% 내외 대출로 전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2개이상 금융회사에 5억원이하의 채무를 보유한자로 3개월미만 연체자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무담보채권 최장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금융기관 분담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은행·보험·상호금융사 등 채권보유 금융기관)
	개인 워크아웃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자로 3개월이상 연체자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 감면 -변제기간: 8년 이내	
	소액대출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이행자	-한도: 1천만원 -금리: 연 2~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용회복기금의 소액대출, 채무조정, 전환대출신용보증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소액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계구조조정제도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해와 정보제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중장기 대책

(1) 통화정책의 전환: 점진적 금리인상

가계부채의 증가의 주요원인은 총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의 유지이다. 주택가격의 상승기대, 생계형 대출 등과 같이 대출수요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저금리 통화정책은 가계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을 가볍게 해준다. 박양균(2010)은 대출시장에서의 채무자와 대부자의 대출결정은 효용극대화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가계의 시간선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저금리는 가계로 하여금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 현재의 소비, 주택구매 등을 더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저금리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많은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상승을 통해 금융비용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경제상황에 비추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⁷⁾ 향후 이러한 저금리 통화정책의 전환 없이는 가계대출의 축소는 어렵다. 다만 금리상승이 저소득가계의 금융비용 상승에 의해 파산과 같은 충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⁸⁾

(2) 가계대출 증가율 소득증가율보다 낮아야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 또한 증가하는 것이 과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정부, 기업, 가계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성장을 또는 소득증가율보다 과도하게 부채를 쓰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는 결국 갚지 못하는 상태로 발산하게 된다. 빚이 무한대적으로 증가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대에 이르기도 전에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그런 만화 같은 세상에 대한 동경을 산산이 깨트릴 것이다. 거시경제학의 동태적최적화 모형에서도 가계 또는 기업의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한다는 기본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한대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가계부채는 1997년 금융위기이후(1999~2010) 연평균 13.0%로 증가하였으나 경상 GDP 증가율은 7.3%에 그쳐 이미 과거 10여 년 동안 매년 가계부채가 성장률에 비해 5%이상 상회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12년 동안 가계부채는 소득증가로 감내할 수

7) 한국은행은 최근 테일러 준칙(기준금리 = 인플레이션율 + 균형실질이자율 + α 인플레이션갭 + β 산출갭)를 이용하여 적정수준의 기준금리로 3.9%를 제시하고 있음.

8) 김현정(2010)의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계층의 가구일수록 부채규모 및 부채가구 비중은 낮지만 금리 및 소득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있는 수준을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부채경제는 장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치하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채축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충격과 부작용이 커서 실패할 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쉬워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한자리 수준의 증가율로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명목경제성장을 범위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정,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0, pp.77-94.
- 남주하·김정렬·이규복,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개혁』, 율곡출판사, 2012.5.
- 박양근,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CFE Report, 자유기업원, 2010.4.
- 신동진,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경제현안분석』, 제55호, 국회예산정책처.
- 유경원,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15권 제4호, 한국은행, 2009.12.
- 이건호,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한국금융연구원, 2011.3.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
- _____, 가계금융조사, 2011.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
- _____,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0.
- 함준호·김정인·이영숙,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분석과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시사점,” 한국금융학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주최 동계정책 심포지엄 발표 자료, 2009.11.
- Lea, Michael,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rtgage Product Offerings,” Special Report, Research Institute for Housing America, 2010.9.
- Rajan, Raghuram G.,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